

국힘, 끝내 한동훈 제명… 정점 치닫는 계파 갈등

당원 게시판 조작 사태…최고위, 징계 처분 16일만에 원안 의결
친한계 16명 “당의 비민주성 드러내…지도부 즉각 사퇴” 입장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공천현금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 총 9인의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제명 시효는 의결 직후 바로”라고 말했다.

윤리위 제명 처분을 원안 확정된 취지에 대해서 “이미 윤리위에서 내용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달라”고만 답했다.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에는 의결권이 있는 9명만 남은 채 안건이 거수 표결에 부쳐졌다.

친한계 우재준 정년최고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한 뒤 자리를 떴고 나머지는 거수로 찬성 의사를 밝혀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제명이 확정됐다고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선

택은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관은 거수 표시가 없었다”며 자신의 입장은 찬성이 아닌 기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고 14일 새벽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최고위에서 곧바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다수 의원이 우려를 표하자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인 열흘 간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같은 날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제명 확정 이 2주간 미뤄졌다.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해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이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이뤄지자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윤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

겠느냐”고 반문했다.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진욱 의원 주도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지역 균형 발전 통합 지원 체계 가동”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생존 전략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중장기적 재정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재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과 설계·공정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전력과 융수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국가가 책임지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간소화 등 파격적인 특



례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정 의원은 법안 소위부터 본회의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법 통과에 앞장섰다. 그는 “수도권 쏠림을 막고 비수도권도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가능…입장권 부정 판매 50배 과징금

국회 본회의…상임위원장에도 필리버스터 사회권 부여

앞으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 집회·시위가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97인에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를 반영해 집회·시위 제한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의 공관 인근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외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대통령 등 공관 거주자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관저·공관의 기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옥외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역할을 감안해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처럼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신설 규정을 뒀지만, 법안을 둘러싼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신설한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

진보당 손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어떤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지와, 과연 대통령 집무실 방해할지를 모두 경찰이 판단한다”며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청와대 앞 100m 이내를 사실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

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공연법 개정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두 개정안은 모두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 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입장권 판매업자의 부정 구매·판매 방지 조치를 위한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을 2차 가해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연합뉴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IGFA 보험GA협회